



의안번호	제 2009 - 22 호
의 결 연 월 일	2009. 11. 16. (제21차 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1팀 제25차 회의 .....	1
1. 일시 · 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4. 회의 요지 .....	1
가.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1
나.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2
다.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2
라. 기타 사항 .....	2
II. 2팀 제17차 회의 .....	3
1. 일시 · 장소 .....	3
2. 참석자 .....	3
3. 주요 안건 .....	3
4. 회의 요지 .....	3
가.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3
나.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4
다.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4
III. 제20차 전체 회의 .....	8
1. 일시 · 장소 .....	8
2. 참석자 .....	8

---

3. 주요 안건 .....	8
4. 회의 요지 .....	8
가.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8
나.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10
다.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13
IV. 향후 일정 .....	16

별첨	이주형, “제1기 양형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한균, “양형위원회와 전문위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김현석, “사기범죄 양형기준 외국 사례”
	서봉규, “제25차 제1팀 회의 논의사항”
	서봉규, “양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제언”



# I. 1팀 제25차 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0. 28.(수) 19:40 ~ 21:10
- 장소 : 대법원 361-2호 회의실

## 2. 참석자(6명)

- 김용철, 김현석, 서봉규, 이상원, 조은경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전문위원 워크숍 논의사항 검토

## 4. 회의 요지

### 가.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팀별 분장과 관련하여, 1팀에서 사기,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를, 2팀에서 절도, 마약, 약취·유인, 식품·보건범죄를 담당하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됨
- 대상범죄의 분장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팀별 업무의 균형성과 개별 전문위원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나.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임시회의와의 간격이 좁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지는 아니함
- 전문위원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되, 본격적인 논의는 향후 전문위원단의 연구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 팀별회의와 제21차 전체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전문위원 2팀에서 전문위원단 및 운영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의 필요성과 범위를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라. 기타 사항

### (1) 전문위원 업무 계획 수립

- 임기 동안 진행할 전문위원 업무추진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2) 양형기준 적용현황 점검

-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범죄별 주무전문위원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 적용현황의 분석은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표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범죄별로 차이를 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 II. 2팀 제17차 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0. 28.(수) 17:00 ~ 18:4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2. 참석자(3명)

- 김한균, 윤정근, 이주형 전문위원

### 3. 주요 안건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4. 회의 요지

#### 가.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1) 2기 양형기준 설정 일정

- 1년에 각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하여 시행하자는 의견(2인)이 제시됨
  - 전문위원의 임기가 1년이고 내년 7월경 임기가 종료될 수 있으며 작성 중인 양형기준을 후임 전문위원에게 인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 영국도 1년에 최소 1~2개를 만드는데 1년 동안 양형기준을 전혀 만들지 않다가 2년 후에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

립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음

○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2년에 걸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개별 양형기준 설정 이후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 추가 양형기준 설정 뿐만 아니라, 1기에서 설정된 8개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운영 점검도 함께 시행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할 때 2년에 걸쳐 2기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 (2) 대상범죄의 구체적 팀별 배분

○ 8개 범죄를 1년에 4개씩 설정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하기로 함

## 나.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전체회의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함

## 다.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운영지원단의 중립적·객관적 조직의 문제

- 양형위원회 사무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당시 문병호 소위원장이 ‘법원직원의 순환보직 형태로 양형위원회 사무기구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병대 기조실장이 ‘양형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그냥 법관 인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의결로 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양형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법원직원들로 사무기구를 구성함으로써, 개정 법원조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양형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양형위원회 사무기구를 법원직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형위원회 사무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제시됨

#### ○ 전문위원 제도의 비상근 문제

- 1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연구보고서가 다른 전문위원들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위원 전체회의나 양형위원회에 그대로 보고되었고, 양형위원회에 실제 상근하는 법원 전문위원이 1명 더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파행적, 편향적으로 운영되었고 항상 공정성 시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상근 여부가 양형기준 설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교법적으로도 검사가 양형위원회에서 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양형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두는 것보다 상근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국책연구기관 또는 대학 연구기관과 상호협력협정을 통해 양형실태 및 양형정책연구를 공동수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 전문위원 구성의 다양화

- 교정공무원, 보호관찰관 등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교정공무원, 보호관찰관 등은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것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교정공무원, 보호관찰관보다는 범죄사회학자, 범죄심리학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 팀별 구분 관련

- 총괄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1팀

과 2팀 구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수석전문위원 제도의 문제점

- 수석전문위원은 법관만이 될 수 있고,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편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양형위원회 보고를 수석전문위원이 독점하면서 법원편향적으로 보고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제도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본질상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의 내용을 양형위원회에 보고할 수석전문위원제도의 존재는 당연히 필요하고, 현재의 법관 수석전문위원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수석전문위원제도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고 전 전문위원들의 검토와 수정의견 제시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문위원단에서 논의되지 않은 양형인자 평가방식 채택의 문제에 대해 2기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

- 법적 근거 없는 행위/행위자 인자 구별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집행유예 기준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형위원회의 법원 편향적 운용 관련 구체적 사례

- ① 위원회 14차 회의 시 ‘5억 미만을 5,000만 원과 2억 원에서 두 번 나누자는 안과 1억 원에서 한 번만 나누자는 안’이 대립했고 이에 대해 당시 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에서 나누는 안을 내놓기로’ 하였으나, 공청회 자료집에서 주를 달아서 “논의 끝에 이러이러한 논거로 양형위원회에서 1억 원에서만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위원회 의결내용과 반대되는 공청회 자료를 작성·배포하였으며, 이에 대해 15차 위원회

회의 시 ‘한인섭 위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기관 의견조회 시에는 ‘대립되는 의견을 적시’하여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받아 보고 결정하기로 의결을 하였으나, 공청회 자료와 동일하게 주를 달아 기관 의견조회를 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양형위원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바 있는바, 이처럼 위원회 의결사항조차 수석전문위원과 운영지원단에 의해 변경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전문위원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청회 자료 등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문언의 취지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편향된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② 확정사건 4만 3,000건에 대한 통계분석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형기준 정립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법원별, 재판부별 양형편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처럼 운영지원단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 양형기준을 계속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운영지원단에서는 전문위원의 통계분석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노성호 교수를 외부 통계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실질적인 분석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해, 전문위원이 상당기간 통계분석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상근인데다 일정에 쫓겨 노성호 교수에게 맡겨서 분석해 줄 것을 운영지원단에 요청하였으나 분석된 것이 없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제시됨

- 형사정책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연구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Ⅲ. 제20차 전체 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0. 30.(금) 16:20 ~ 21:00
- 장소 : 양평 대명리조트, 백합 세미나실

####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현석, 박영식, 서봉규, 윤정근, 이상원, 이주형, 조은경, 최석운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4. 회의 요지

##### 가.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1) 양형기준 설정 일정

- 아래와 같은 이유로 1기와 달리 양형기준 설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4개 범죄군 또는 일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먼저 확정하여 시행하고, 이어 나머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우선순위가 높은 범죄부터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양형위원

회의 활동 성과에 대한 불필요한 외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개별적 양형기준제를 채택한 만큼 먼저 완성된 양형기준을 분리하여 시행하더라도 문제될 점이 없으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유보할 명분이 없음
- 전문위원 임기종료 시점을 고려할 때 우선 설정할 범죄에 맞추어 전문위원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1기와 마찬가지로 개별 양형기준 설정 후 양형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한꺼번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2기에서는 최초 양형기준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양형기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먼저 시행할 경우 양형기준 수정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시행되자마자 수정되는 결과가 발생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조장될 우려가 있음
-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설정 속도가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음
- 이 방안에 의하더라도 대상범죄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의 효율성이 저해되지는 아니함

## (2) 구체적 대상범죄 팀별 분장

- 구체적 대상범죄의 분장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 ① 1팀에서 사기,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를 담당하고, 2팀에서 나머지 범죄를 담당하기로 하는 방안, ② 1팀

에서 사기,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절도를 담당하고, 2팀에서 나머지 범죄를 담당하기로 하는 방안, ③ 1팀에서 사기,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식품·보건범죄(중한 유형)를 담당하고, 2팀에서 나머지 범죄를 담당하기로 하는 방안, ④ 사기, 절도, 식품·보건범죄(중한 유형), 공무집행방해를 우선 설정 대상범죄로 선정하고 이를 다시 1, 2팀에서 배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 논의 결과 다수의견에 따라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를 범죄간 연관성, 업무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팀별 분장하기로 함

	1팀	2팀
대상 범죄	사기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식품·보건범죄(중한 유형)	절도 마약 약취·유인 공무집행방해

## 나.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1) 개요

- 위원회 제4차 임시회의 결과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위원단 검토를 추가로 진행한 다음,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 여부
  - 특별양형인자의 발굴 및 특별 형량조정제도의 검토
  -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 감경의 전반적 점검

## (2) 논의 경과

- 우선,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이 현재의 양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가)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 여부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상향을 포함한 신속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제의 목적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최근 제기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기가 권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경우 작량감경할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감경이 이루어진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점이 문제이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수위나 입법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양형실무는 지나치게 관대함
  - 법관을 위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양형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조두순’과 같은 유형을 이례적인 경우라고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사례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조두순’ 사건에서 ‘중한 상해’ 외에도 특별가중인자가 있다고 보아 형량범위 특별조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정형과 동일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개별적 양형기준제 방식을 채택한 이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수정하더라도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양형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의식을 반영하여 문제점

을 바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 형사특별법으로 인하여 조직폭력범죄가 일소되는 등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를 반드시 부정적 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의 시행경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량기준을 상향하거나 양형기준의 기본틀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행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위주로 기준을 제시한 다음, 이례적으로 중한 유형에 대해서는 형량범위 특별조정 등을 통해 양형기준 내에 포섭하도록 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불합리한 양형기준이 도출될 우려가 있고, 과거 각종 형사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정형 하한을 가중함으로써 나타났던 부작용을 되풀이할 우려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양형기준 적용 대상도 아닌 ‘조두순’ 사건만을 이유로 양형기준을 즉시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행 양형기준의 시행경과를 충분히 살펴본 후에 양형기준상의 형량이나 기본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성급하게 조정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전체 범죄군에 미치게 되며, 헌법재판소에서 법정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형벌 사이의 균형 또는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 중형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선 등이 보다 중요함

(나) 양형인자 조정

-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극히 중한 유형에 적용될 양형인자를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주취감경 및 심신미약 감경

- ‘조두순’ 사건을 통해 종래 성범죄 양형실무에서 주취감경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관대한 형이 선고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의견이 제시됨
- ‘조두순’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며, 문제가 지적된 주취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 감경제도에 대한 연구자료의 축적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전문위원단의 본격적인 양형기준안 작성 연구를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전문위원단 운영방식 등에 관한 토의를 진행

(1) 수석전문위원 제도 관련

- 수석전문위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석전문위원직을 1, 2팀장이 교대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수석전문위원의 회의 진행 및 보고 등이 법원 편향적으로 운

영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수석전문위원직을 비법관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수석전문위원의 존재가 당연히 필요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단의 구성, 양형기준이 법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석전문위원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 전문위원 상근화 관련

- 양형위원회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 상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법원, 검찰, 교수, 학계 등 일부 전문위원의 상근화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고 쟁점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음
- 대검에서는 다른 내부 업무의 부담이 많아서 상근처럼 활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임
- 법원, 검찰 이외의 직역에서도 상근이 가능한 전문위원을 확보할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제1기 위원회 및 전문위원단의 운영성과 등에 비추어 전문위원 상근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됨
- 법원, 검찰 전문위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다른 업무부담을 조정해 줌으로써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상근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일부 전문위원(법원, 검찰 등)을 중심으로 상근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다른 전문위원이 형식적 관여자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운영지원단 인력이나 연구용역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3) 전문위원 구성의 다양화 관련

- 전문위원단의 증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 보호관찰 관련 법무부 공무원이나 법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자를 전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 추가는 필요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논의되어야 하며, 전문위원단 직역별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기보다는 검찰 전문위원 중 일부를 교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충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4) 사무기구의 중립성 관련

-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성된 위원회 사무기구의 설립에 문제가 있으며, 운영지원단이 모두 법원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상 업무보좌를 위한 사무기구인 전문위원단을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인 운영지원단만을 법원 직원으로 구성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21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21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